

그린피스 정책제안서

제22대 국회의원 선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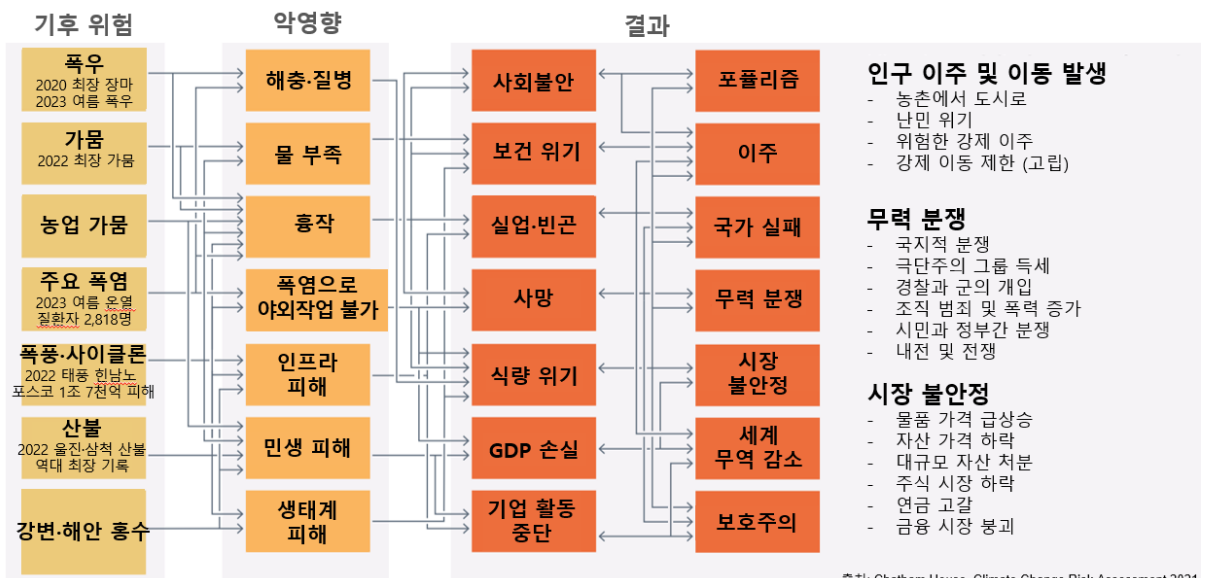
2024. 2. 7

■ 제안배경

1. 기후위기 악화에 따른 시급하고 야심찬 대응 필요

-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**1.1도** 상승 → 명백히 **인간 활동이 원인**
- 2도 상승 시 99% 산호초 소멸하고, 한국 폭염시 평균온도 4.5도 상승 → 되돌릴 수 없는 피해 야기하므로 **1.5도 이내로 상승 제한**
- 이를 위해 **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 가까이 줄이고, 2050년에는 순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'탄소중립'** 달성해야 기후재앙 피할 수 있음
- 그러나, 현재 세계는 1.5도가 아니라 **2.7도 상승 경로에 있음**. 설령, 1.5도 제한에 실패하더라도 최대한 온도 상승폭을 막는 것이 중요함
- **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순위는** 지난 해 주요국 중 최하위권으로 **'기후악당'** → 한국은 주요 온실가스 배출 선진 산업국으로 **더 큰 책임과 역할 요구됨**
- 우리나라 역시 2023년이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래 연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해였고, 2018년 역대 최악 폭염, 2020년대 최장 장마, 2022년대 최장 산불, 2022년대 최장 가뭄 등 **기후변화의 피해를 이미 체감하고 있음**
- 최근 10년(2013-2022)간 극한기상현상으로 인해 총 260명 이상 사망하고 재산 피해도 4조 원에 육박함. 아래 도식서 보듯이 기후변화는 우리 사회에 **심각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야기함**

<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>



2. 기후위기는 경제위기이며 빠르고 과감한 전환이 산업 경쟁력

- 다보스 포럼의 2024년 '글로벌 리스크 보고서'에서 전 세계 약 1,500명의 전문가들이 선정한 향후 10년간 가장 심각한 리스크 **1위는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기상 현상, 2위는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시스템의 치명적인 변화, 3위는 생물 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** 였음. 1~3위가 모두 기후위기와 관련된 위험이며 **기후위기가 곧 경제위기**임을 보여줌
- 특히,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 100%를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**RE100** 이니셔티브와 글로벌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이 기후 변화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기 위한 투자자 주도의 **CA100+** 이니셔티브의 확산 및 EU의 **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**와 **공급망실사법**을 비롯하여 주요국의 기후 공시 의무화 등 기후위기 대응 위해 세계 시장과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
- EU의 **Green Deal(2019)**과 미국의 **IRA(2022)**에 이어, 다시 EU의 **탄소중립산업법** 및 **핵심원자재법** 등 기후위기 대응이 세계 경제 시스템 전환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, 이러한 세계 시장의 기후위기 대응 흐름에 빠르게 쫓아가는 것이 산업 경쟁력 유지 및 강화에 핵심

3. 유권자의 요구는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

- 로컬에너지랩과 녹색전환연구소가 1만7천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'기후위기와 유권자 관계에 대한 기후위기 인식 설문조사 결과'는 이번 총선에서 기후위기 대응 공약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줌
 - 10명 중 9명이 기후변화가 실제 일어나고 있다고 응답
 - 기후위기 대응 강조 후보에게 더 관심을 둘 것이다 : 64.3%
 - 정치적 견해와 다르더라도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 마음에 드는 후보가 있다면, 투표를 진지하게 고민하겠다 : 65.3%
- 특히,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기후위기의 가장 큰 당사자인 청년을 위한 기후 정책이 제22대 총선에 채택될 수 있도록 2023년 12월 '그린피스 청년 기후 정책 해커톤을 진행'하였음. 해커톤 결과 역시 그린피스의 본 정책제안서에 반영되어 있음

정책명 : 세대간 기후 정의를 위한 탄소예산 정책	
정책분야	환경, 청년, 아동
문제분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현재 정부 정책에 따르면 청년과 아동 등 미래세대에 과도한 탄소감축의 짐이 부여됨 ● 보수적인 가정에 따르더라도 한국의 탄소예산은 45억톤 ● 정부 정책 대로라면 41억톤의 탄소예산을 2030년까지 소진해 미래세대의 자유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게 됨 ● 현재 정부 정책은 탄소예산에 대한 고려가 없으며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도 탄소예산과 관련된 내용이 전무함
목 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세대간 공정한 탄소예산 분배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목표 수립 ● 사회적 합의를 통한 탄소예산의 공정배분 법제화 ● 입법부의 기후 에너지관련 입법과 행정부/지자체의 탄소중립 정책 수립 과정에서 탄소예산 고려
이행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개정, 탄소예산과 세대간 정의로운 분배의 원칙 추가 ●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개정, 각 정부 정책 수립 등에 있어서 탄소예산에 대한 고려를 명문화 ● 정부 부처가 탄소예산에 따른 정책 목표 수립, 미이행시 상응하는 패널티 부여 ● 상설화된 국회 기후특위가 국가 중단기(연도별) 탄소예산 심의, 의결하도록 기후특위법 입법
이행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2024~2025년
재원조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별도 재원 불필요

정책명 : 기후위기 대응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	
정책분야	산업, 환경
문제분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한국, 책임과 역할 비해 온실가스 감축 '매우 불충분' → 기후약당 ● RE100, CBAM 등 국제 기후규제 강화 → 한국 수출 경쟁력 악화 ● 전력 화석연료 비중 현재 60% → 2030년 여전히 40% ● 재생에너지 비중 현재 OECD 꼴찌 → 2030년 목표 태양광+풍력 16% 불과 ● K-ETS 시행에도 불구하고 2015-2022 TOP20 배출량 6% 증가 ● 화석연료 과도한 의존으로 한전 적자 200조
목 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에 한국의 책임에 비례한 역할 수행 ● 탄소예산에 기반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총량 관리 ● 온실가스 배출량 2030년 50% 이상, 2035년 60% 이상 감축 ● 2035년 화석연료 비중 20%, 재생전력 비중 50% 이상 목표 수립 ● 한전 적자 해소 및 더 큰 사회적 비용 감소 위한 공정한 비용 분담
이행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2024-2030 온실가스 총배출량 총량 관리 (탄소예산 적용) ● K-ETS 배출허용총량 축소, 유상할당 비율 강화 (전환 부문 100%) ● 산지 훼손 줄이는 지붕형, 수상형, 영농형 태양광 추진 및 금융지원 확대 ●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(한국형 FIT) 부활 및 확대 ●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제도 주택용 및 일반용 소비자 대상 확대 ●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 도입 ● 분산형 재생에너지 활성화 위한 전력망 보강 및 확대 ● 공정한 분담 : 1TWh 이상 전력 다소비 기업 대상 누진제 도입 or 주택용만 적용되는 누진제 없애고 전반적 전기요금 정상화
이행기간	● 2024-2028
재원조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녹색프리미엄 최소 입찰금액 상향 조정 → 기금 활용 ● 교통에너지환경세 활용 혹은 탄소세로 개편해서 활용

정책명 : 원전 정책 방향 결정에 민주적 의사 결정 시스템 도입

정책분야	산업, 환경
문제분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한국 이미 원전 규모 세계 5위, 건설 규모 세계 4위(선진국 중 1위) ● 원전 밀집도 세계 1위, 원전 인근 중요산업 시설 및 많은 인구 밀집 → 후쿠시마와 같은 대형 사고 시 리스크 규모 세계에서 가장 높음 ● 세계 원전 발전 비중 '96년 17.5% → '22년 9.2%로 지속 하락 ● 지난 5년간 영구 폐쇄 39기 vs 신규 가동 27기 → 순 감소 추세 지속 ● 노후 원전 수명 연장 및 신규 원전 건설 없이도 이미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 위해 세계에서 원전을 3~5번째로 많이 활용할 국가 ● 방사성 폐기물 저장 포화 상태 ● 노후원전 안전 문제 지속 발생 (수조 누설, 부적합 부품 확인 등) ● 원전은 산불, 태풍, 폭우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취약 ● 기후위기 대응에 너무 느리고 비싸며 위험한 대안 ● 원전 수출 매우 좁은 구매자 우위 시장이며, 한국 13년간 수출 제로 ● 정권 변화에 따라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사회적 갈등 증대
목 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기후위기 시대 원전 정책 방향에 대한 투명하고 민주적 의사 결정을 위한 국민과 원전 인근 주민의 의사 반영 체계 도입 ●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원전 가동률 재고: 노후원전 폐쇄
이행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위한 원전 역할에 대한 사회적 토론 추진 ●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호환성에 대한 기술적인 검증 및 토론 추진 ● 2050년 탄소중립 향한 장기 원전 방향에 대한 사회적 숙의 구조 수립 ●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법안 사회적 논의 추진 ● 방사성 폐기물 법안에 대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주민 대상 투표 실시 및 이에 따른 입법 추진 ● 노후원전 수명 연장 및 신규 원전 건설 논의 시 원전 부지 인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주민 대상 투표 실시, 2/3이상 동의 시 허가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
이행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2024-2028
재원조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별도 재원 불필요

정책명 : 투자자·기업·정부 위한 기후 공시 강화	
정책분야	산업, 환경
문제분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 위해서는 산업계의 변화가 가장 중요 ● 산업계 변화 위해서는 기후 문제 해결 위한 금융이 바로 서야 ● 미국과 유럽 중심의 신통상 압력(탄소국경조정제도) 강화, 지속가능성 정보공개 의무화 전개 ● 현행 온실가스 다배출, 수출 중심 경제체제에서 한국 기업들의 기후관련 정보공개와 기후변화 대응능력 강화 요구 커져 ● 2050년 탄소중립 위해 약 2,000조원의 투자 필요
목 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투명하게 파악 ● 기후변화 대응 한국 기업의 정보 부족에서 초래될 수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능성 차단 ● 기업은 기후 위험을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음 ● 정부는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개발할 수 있음 ● 기후금융 조성을 위한 기초 인프라로서 기후 정보공개 투명성 확보
이행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보-기후변화 관련 기회와 위험의 내용 및 대응 계획,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 목표, 대응 계획 및 감축 목표의 이행 현황 및 의사결정 구조 등-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● 금융위(관련 기관 한국회계기준원, 한국거래소)로 하여금 KSSB 기준안과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의 조기 확정 유도 ● 중소기업까지 고려해 새로운 공시제도 이행 관련 제도 정비(환경정보공개와 연계방안),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 등 실무적 지원 방안 마련
이행기간	● 2024-2028
재원조달	●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의 58조 2항에서 ‘금융 촉진을 위한 법률은 따로 정한다’에 의거한 관련 특별법 신설

정책명 : 친환경 모빌리티 활성화	
정책분야	국토교통, 산업, 환경
문제분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윤석열 정부는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등록 금지를 공약했지만 미이행(EU, 미국 캘리포니아 등: 2035년 내연기관차 신규 판매 금지 발표) ● 윤석열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5년 'EURO 7' 도입을 공약했지만 논의 및 이행 미진 ● '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' '무공해차 보급목표제' 유명무실화 ● 이동수단은 사용단계 배출 규제 어려움, 신차 배출규제 강화 필요 ●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위한 전기차 확대 및 친환경 이동 시스템 전환 필요 ● 실효성 있는 교통 수요관리 정책 부재, 자동차 등록대수 2023년 말 2,600만대 육박 (2017년 이후 15% 증가) ●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40%대에서 28.6%(2021)대로 하락 ● 탄소중립기본계획에 구체적인 수요관리 및 주행거리 감축 목표 부재
목 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2030년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● 2025년 경유 자동차 EURO 7 도입 ●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억제 및 주행거리 감축 등 강력한 수요관리 정책 추진 ● 대중교통 체계 개선 및 활성화 통한 시민 이동권 보장, 온실가스 감축
이행방법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내연기관차 퇴출 및 무배출 차량 보급 촉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2030년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 등록 금지 정책 실시 ● 『탄소중립 기본계획』에 따른 '현행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' 강화 ● 무공해차 보급목표 및 기여금 제도 강화 ● 맞춤형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확대 및 주차장 의무설치 비율 상향 ●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 2. 대중교통 활성화 및 자동차 수요관리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재택근무 활성화를 통한 교통혼잡 완화 ● 대중교통 이용 유인을 위한 강력하고 실질적인 요금 정책 구축 ● 수요에 기반한 버스노선 확충 및 증차 통해 배차간격 단축 ● 정류장 요금 사전 지불 시스템 도입 등 BRT 체계 편의성 향상 ● 대중교통전용 지구(차없는 거리 등) 및 PM, 자전거 이용 편의성 확대 ● 지역간 균형을 고려한 교통 체계 개선
이행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2024-2028
재원조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교통시설특별회계 내 재원 분배를 통해 대중교통 지원책 구체화 ● 유류세 및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의 효과 재고 및 정상화로 세수 확보

정책명 : 청년 빈곤 및 음식 쓰레기 문제 해결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	
정책분야	환경, 식품, 청년
문제분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국내 공급 농식품 가운데 약 14%가 폐기, 경제적 비용 20조원 → 보관하다 폐기하는 음식물이 9% 차지 ● 베이커리, 뷔페, 마트 신선식품 등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 공급하기 어려운 품목들이 대부분을 차지 ● 배달서비스 주 이용층은 2030세대와 1인 가구 ● 1인 가구 비중이 34.5%(750만 가구)로 가장 큼
목 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조리 후 판매되지 못해 버려지는 음식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→ 음식물 쓰레기 감소 & 1인가구와 청년층의 생활비 절약
이행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2016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시작한 투굿투고(Too Good To Go)는 현재 전 세계 14개국으로 서비스 확대한 결과, 전 세계 8만 7천개 이상의 식당 및 식품 업체와 제휴해 3,700만 명이 사용 ● 기존 '공공배달앱' 인프라 활용하여 지자체 주도로 제휴업체들이 못 팔고 남은 음식을 사용자가 어플로 예약한 뒤 방문해 수령 ● '용기 내 캠페인'처럼 다회용기 사용하여 플라스틱 사용 절감 ● 이용자 2km 반경 걸어가거나 자전거 타고 방문할 수 있는 거리 적용 ● 민간 업체가 운영하는 '투굿투고' 대비 기존 공공배달앱 활용하여 정부가 운영하게 되면 업체 부담 제휴비 가격도 낮추고, 음식물 처리 비용 절감 가능 ● 사용자가 어플 가입 시 식품 알레르기 해당 사항 기입 후, 알레르기성 식품을 팔지 않는 업장만 해당 사용자에게 노출되도록 알고리즘 활용 ● 소비기한 표시제 2024년부터 완전 적용하여, 업장에서 소비기한보다 최소 이틀 이상 남은 음식을 우선 제공토록 의무화
이행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서울, 경기 수도권 지역에서 시범 실시 후 2026년부터 전국적 확대
재원조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환경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예산 일부 전용

정책명 : 환경을 지키는 청년에게 주택청약 가점 부여	
정책분야	환경, 주택, 청년
문제분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내 집마련을 위한 20대의 청약통장 가입률이 가장 높지만 가점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기에 당첨비율은 현저하게 가장 낮음. 이에 따라 20대 ‘청포족’(청약을 포기하는 사람들)이 늘어나고 있음 ● 청년층의 주거불안은 자산격차 뿐만 아니라 출산·결혼 기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 ● 안정적인 주거가 마련되지 않은 청년 층은 기후위기에 있어서는 가장 큰 피해를 받게 될 세대이기도 함 ● 저출산, 고령화,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야 하면서 동시에 N포 세대로 불릴 정도로 힘든 삶의 조건을 지닌 청년 세대 지원책이 필요
목 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상대적으로 주택청약 가점에서 불리한 청년세대가 기후위기 대응 위한 친환경 활동을 열심히 했을 때 그 성과를 주택청약 가점으로 연결시키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체계 수립
이행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청년세대가 청년 기간(만19세~만34세) 동안 시스템적으로 인증 받을 수 있는 친환경 소비 생활을 했을 때 최대 15점(예시)의 주택 청약 가점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하여 청년들의 친환경 소비 및 생활 습관을 장려함 ● 주택청약에 있어 운 보다 노력, 기간 보다 실천을 더 강조하는 요소를 추가 함으로서 기존 제도 보완 ●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가입자, 리필스테이션 이용객, 제로웨이스트 상점 이용자, 무공해 공유차량 이용자,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자, 에코마일리지/그린카드 사용자 등이 주요 대상
이행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2024-2028
재원조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별도 재원 불필요